21-S40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2021년 **12월 15일(수)** 14:00
온라인 생중계

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 일 시: 2021. 12. 15(수) 14:00
- 장 소: 온라인 생중계 (※ 줌(ZOOM) 진행)
- 주 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행)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행사 세부일정

사회: **하형석** 센터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시간		내 용
13:30~14:00		등록 (온라인 접속)
14:00~14:10	개회	개회사 **김현철**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사말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 (여성가족부)
14:10~14:40	주제 발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좌동훈**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40~14:50		휴식 및 라운드 테이블 준비
14:50~15:50	라운드 테이블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좌장 **김진호**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패널 **김성희** 박사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김소영** 팀장 (한국 YMCA) **김재우** 과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현웅** 실행위원 (광주아동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15:5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폐회

목 차

○ 주제발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1

좌동훈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종합토론 ····· 19

김성희 박사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21

김소영 팀장 (한국 YMCA) / 23

김재우 과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7

서현웅 실행위원 (광주아동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 31

주제발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좌 동 훈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2021년 12월 15일

좌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 1. 연구 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내용과 방법
- 2. 주요결과
  - 선행연구 고찰
  - 청소년 참여활동 실태
  - 참여활동 관련 면담조사
  - 전문가의견 조사
- 3. 정책제언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01. 연구 개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은 사회 참여라는 능동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함께 하려는 모습이 늘어남.
- 청소년 참여는 과거1890년대에도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응하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교육 반대, 만세운동 등과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독재정권과 맞서는 활동, 1990년대 를 거치면서 '학생인권 ' 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김지수, 2021). 2000년대 이후 청소년은 온라인 매체 등의 발달로 인해 소규모,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선거, 환경, 젠더, 차별, 안전 등 다양한 문제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청소년 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 제정과 의회 활동 추진,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청소년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참여 연령을 낮추는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계에서는「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등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 실시
- 청소년 참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참여확대를 모색하거나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참여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음.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성세대 안에서 청소년이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에 나서는 것에 대해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틀에 가두거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면이 강함.
-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가?와 점차 다양화되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등에 대해 제기됨. 제도적 지원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 네트워크 참여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나 보완점 등에 대한 논의 미비
- 참여 활동은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필요한 요소임. 따라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중요
- 청소년 참여 활동과 권리 인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권 안과 밖이 구분 없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기존의 제도권 내 참여 활동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제도권 내·외 참여 활동에 대한 연계 방안 마련
- 제도권 외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여 권리의식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도출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청소년 참여 정책 환경 분석
-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현황 및 실태
-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연구 방법

-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외 사례 조사
- 제도권 내외 참여 활동 기구 및 네트워크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전문가 자문 실시
- 청소년 참여 관련 현장실무자와 청소년 대상 심층 면담 실시
-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6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02. 주요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 참여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자 및 관련 기구에서 나타난 개념 정리

→ 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중에 참여권 포함되면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세계적 관점 전환

→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 보호의 존재로 바라보던 관점이 아동·청소년을 삶의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논의의 근거로 전환 시작

참여권 관련 핵심조항	
▪ 아동·청소년의 견해 존중(제12조): 의사표명권과 절차적 권리	▪ 집회.결사의 자유(제15조)
▪ 표현과 매체의 자유(제13조)	▪ 사생활보호권(제16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4조)	▪ 정보접근권(제17조)

●청소년 참여의 패러다임 전환과 참여의 유형 과 단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구분	전통적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관점	문제 또는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자원 또는 시민, 주체로서의 청소년
청소년 참여	축소, 소극적, 부정적	확대, 적극적, 긍정적
청소년의 역할	• 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청소년 / 미래시민 • 변화의 추종자 / 수동적 존재	• 정책 참여자(주체)로서의 청소년 / 현재시민 • 변화의 유발자(주체) / 능동적 존재
정책의 초점	소수 문제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격리 문제의 예방과 치유	일반 청소년의 역할 수행과 활동 지원 참여와 역할부여 행복한 성장과 역량 개발
성인과 청소년 관계	성인이 주도, 청소년은 추종	성인과 청소년의 파트너십 형성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행연구 고찰

● 정부주도 여부에 따른 참여 형태의 구분(김형주, 김옥순, 김민, 송창석, 손의숙, 심한기, 2003)

→ A분면의 청소년 참여: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조직된 만큼 행·재정적지원을 받는 경우

→ B분면의 청소년 참여: 비정부 기관이 주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권의 청소년 관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행동을 취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는 점에서 제도화된 특성

→ C분면의 청소년 참여: 비정부 기관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면서도 참여의 활동이 제도권 내에서의 참여에 중점을 두지 않음

→ D분면의 청소년 참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참여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참여가 직접적인 제도권 내 정책결정 활동 참여가 아니라고 하는 점으로 비제도권형의 청소년참여

●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형태를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참여활동 실태

● 제도권 청소년 참여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가족부, 지자체/지방의회, 학교, 교육청, 경찰청 등에서 청소년 참여 기구 등 시행

–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239개), 청소년운영위원회(305개)

– 지자체/지방의회 중심의 청소년의회,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참여예산학교, 주민총회-주민자치회

구분	지역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39개 지역(지자체 관리현황)	31개 지역(의회 관리현황)
참여예산제 조례(청소년 기준 포함)	20개 지역	
시민(주민) 참여 기본 조례(청소년에 관한 기준 포함)	15개 지역	

– 학교와 교육청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참여예산제, 학교협동조합

– 경찰청 청소년 정책자문단

● 비제도권 청소년 참여활동으로 청소년 인권활동 단체

–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지음,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나비효과, 활기, 다다다협동조합,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나다, 청소년 유니온, 위티, 세움, 경기청소년평화나비, 당진청소년평화나비, 인연, 조례만드는청소년, 청소년기후행동, 우물 밖 개구리, 고고연구소, 10대연구소, 달그락달그락 등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활동 관련 면담조사

□ 조사 개요

●2021년 8월~10월 중 일정을 조정하여 1~4명 단위의 소집단으로 온라인 면담 실시

●눈덩이 표집방법 활용, 참여관련 전문가 14명, 청소년 13명 대상 면담조사, 전체 녹음 후 전사하여 내용분석

구분	참여관련 전문가	청소년
대상자 이력	교육계:전현직 교사, 장학사 청소년계: 청소년기관, 청소년의회, 문화정보센터 기타: 공공기관, 민간단체, 청소년인권단체, 지역활동가	(중·고·대) 학생(과거 경험 또는 현재 활동 중인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면담 내용

대상자	내용
참여관련 전문가	기존 참여기구에 대한 평가, 제도권 밖에서의 참여활동에 대한 평가, 청소년참여와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문제점, 제도권 안과 밖에서의 청소년활성화 방안, 참여활성화와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참여활동의 방향성 등
청소년	참여활동 동기, 참여활동 분야 및 관련 정보, 참여활동 시 지지했던 대상, 소규모활동 및 네트워크 등 연대를 통한 활동에 대한 장. 단점, 참여활동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기존 공적 참여기구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향, 공적 참여기구와 개별, 단체 소속 참여활동의 역할 공유방법, 참여활성화와 권리의식을 높이는 방안

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활동 관련 면담조사결과

핵심주제	하위주제
1. 미성숙과 한계	1-1. 청소년=학생=학교, 1-2. 청소년 역량에 대한 믿음 부재, 1-3.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 1-4. 참정권이 없는 존재, 1-5. 활동의 주체이지만 권한이 없는 존재
2. 통합적인 교육체계 구축 필요	2-1.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 강화, 2-2. 청소년활동관련 전문인력(교사, 청소년지도자,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 강화, 2-3. 보호자 및 성인 대상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3.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	3-1. 개별활동 목표부터 시작, 3-2. 작은 모임(동아리)에서 출발, 3-3. 청소년 자신을 둘러싼 이슈에서 출발
4. 자치와 자율 강화	4-1. 학교 내 학생자치 보장 강화, 4-2. 공적 참여기구 내 청소년 자치·자율 보장과 역할 재조정, 4-3. 참여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강화, 4-4.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자치권 강화를 통한 운영 다양성 확보
5. 참여활동 공유(네트워크) 강화	5-1. 참여(공익)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5-2. 학교와 민간 기관 등의 지역기관 간의 정보 공유 강화, 5-3. 네트워크를 총괄 지원 전문조직(연합체)의 구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6. 문화 및 정책방향의 변화	6-1.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간 민주적인 가족 문화형성, 6-2.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와 기관 문화형성, 6-3.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시각과 정책기조 변화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활동 관련 면담조사결과

□ 조사 결과(1. 미성숙과 한계)

주제	면담 내용
1-1. 청소년=학생=학교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자퇴생 아니야? 아 자퇴생? 좀 놀았구나 약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저 주변에 있나 학교 밖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젝트에 참가하려 대중교통을 탔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께서 왜 이 시간에 학교 안가고 돌아다니느냐 되게 당연히 청소년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는 거 같아요"
1-2. 청소년 역량에 대한 믿음 부재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청소년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중에 뭐가 될까 나중에 뭐 어른이 돼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인생이 시작되는 거 같은 느낌으로 지금 현재는 인생이 약간 대기하고 있는 느낌 그런 거를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익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네 아무튼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 일단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1-3.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	"아동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해야 돼요. 너 시민이야라고 아동 시민 또는 동료 시민으로 인정을 해야 아이들이 아 나는 우리 사회의 주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1-4. 참정권이 없는 존재	"선거권 연령 저희가 이제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도 좀 했었고 그 청소년 전반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을 좀 바꾸어야 한다 약간 이런 활동들을 좀 해오기도 했어서"
1-5. 활동의 주체이지만 권한이 없는 존재	"의회나 뭐 위원회 같은 게 있지만 실제 좀 현실적인 권한 같은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뭔가 막 꾸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단위에서 뭔가 결정하거나 진짜로 반영시켜서 집행하거나 뭐 이런 역할까지는 없는 거 같다."

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활동 관련 면담조사결과

□ 조사 결과(2. 통합적인 교육체계 구축 필요)

주제	면담 내용
2-1.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 강화	"제 생각에는 이런 그런 참여 활동이 무엇인지 자체에 대해서 이 청소년들이 다 알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2. 청소년활동관련 전문인력(교사, 청소년지도자,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 강화	"학교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있던 다른 학생이 자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는 그 공문이 공문을 내려왔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 이런 거 내려왔다고 공문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너 이런 거만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서 아예 그냥 애초에 막았던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선생님들 사실상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큰데 그런 식으로 아예 강제로 제재를 당할 정도로 그 선생님의 인식에 따라서 아예 저의 활동 역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2-3. 보호자 및 성인 대상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좀 답답했던 점은 제가 보통 도의회나 구청 같은 데에 발표를 하러 가면 그 이제 도의회 관련 분들 그리고 도의원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뭐야? 학생도 왔어 학생도 이런 자리에 오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인사도 잘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악수도 가끔은 안 해 안 해주신다거나 옆에 다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면 좀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로 보시고..."

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활동 관련 면담조사결과

□ 조사 결과(3.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

주제	면담 내용
3-1. 개별활동 목표부터 시작	"처음에 참여했을 당시 그냥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진짜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내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그런 걸 했어요. 진짜 그냥 프로젝트 제목이 '나를 돌보기'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 중략–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나갈 좀 더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진짜 별거 아닌 프로젝트였지만… – 중략 – 진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고 조금씩 성취를 이루고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분야에서도 관심 생기고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도 되는구나. 이런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3-2. 작은 모임(동아리)에서 출발	"일단 동아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회탐구동아리라고 해서 저희 이름 나름 '소시지'라고 했어. SOSIG에요. 그 약자인데요. 그 스터디 오브 소셜 이슈 그룹이라고 어 거창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거를 소시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애들이 수학이나 과학 쪽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거기서 뭐 동아리 모집한다고 하면 엄청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 몇 차 면접까지 하면서 과학과 관련된 어떤 이과 계열은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사회탐구 동아리는 사회탐구 동아리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어려운 거 귀찮은 거 이런 인식이 애들한텐 좀 많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조차도 애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3-3. 청소년 자신을 둘러싼 이슈에서 출발	"실천 경험 실천으로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기억에 남는 것도 이제 그 제주 4.3 그니까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3에 관한 역사 기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그니까 서술이 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사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활동 관련 면담조사결과

□ 조사 결과(4. 자치와 자율 강화)

주제	면담 내용
4-1. 학교 내 학생자치 보장 강화	"중고등학생들 뭐 어떤 초등학생 학생들도 가장 많이 생활하고 또 가장 많이 다른 청소년들과 만나는 곳이 학교잖아요. 만나고 학교 생활하는 게 그래서 좀 학교 안에서부터 이런 어떤 시민적 권리 뭐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집회 자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4-2. 공적 참여기구 내 청소년 자치·자율 보장과 역할 재조정	"우리 목소리가 어디까지 들릴까에 대한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또 이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과 법과 재정의 문제들은 또 활동으로 하기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참여기구라던지 이런 공적인 곳에 그런 기구들이 그런 좀 신문고 역할 같은 것들을 좀 하면 네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4-3. 참여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강화	"돈이 많이 들진 않았지만 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도 이런 것들은 사실 제 역량 안에서 해야 되니까 왜냐면 부모님의 반대가 있으니까 부모님 별로 지원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중략 – 작년에 이제 청년 수당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그 제도를 이제 조금 받으면서 되게 생계나 활동하는 점에서 되게 큰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4-4.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자치권 강화를 통한 운영 다양성 확보	"기관마저도 자치가 안 되거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많이 있기보다는 행정 권력이 매뉴얼을 갖다 대고 운영을 통제하고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데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어떤 걸 결정한다. 그래도 기관 자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관의 컨셉이나 방향까지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기관의 컨셉이나 큰 방향을 정의하고 정리했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상당 부분 권한이 가 있을 수 있거나 또 청소년위원회뿐만 아니라 센터에 일반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센터 운영위원회 이런 또 센터 일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합의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활동 관련 면담조사결과

□ 조사 결과(5. 참여활동 공유(네트워크) 강화)

주제	면담 내용
5-1. 참여(공익)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필드에 있는 실제 어른들의 소리를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 게 그 ○○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갔을 때 저희가 센터장님을 뵀었어요. 근데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니까 그럼 너희들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실행해볼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사실 저희가 혼자 그냥 프로젝트 단독으로 접촉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센터장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연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바로 만나서 뭔가 엑스트를 바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영향력을 실제로 같이 만들 수 있는 어른들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5-2. 학교와 민간 기관 등의 지역기관 간의 정보 공유 강화	"○○○○○○(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해온 그런 팀들에 대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이 그 연결해주는 식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대안학교랑 공통점을 갖고 있는 팀들간에 어떤 대안 교육 연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의 연결해주는 작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5-3. 네트워크를 총괄 지원 전문조직(연합체)의 구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너무 다 이게 분절적이고 파편화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합성 있게 할 수 있는 이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 중략 - 청소년 참여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떤 활동들을 정말 다양하게 열어놓아도 이게 너무 파편화야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합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활동 관련 면담조사결과

□ 조사 결과(6. 문화 및 정책방향의 변화)

주제	면담 내용
6-1.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간 민주적인 가족 문화형성	"아이를 그곳(대안학교)에 보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보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과연 정치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에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6-2.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와 기관 문화형성	"저는 학교 안에 있는 어떤 민주적인 문제 뭐 학생들이 좀 학생 인권법? 사실 그런 거죠 뭐 학교 내에 체벌이라던지 두발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던지 어떤 차별 금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을 참여도 계속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3.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시각과 정책기조 변화	"2003년에 이제 그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온통 여기저기 이제 참여의 깃발이 휘날리면서 이제 그때의 한 다섯 개 정도의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이제 펀딩을 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이제 그때 구성을 했었어요. - 중략 - 여가부만이라도 아동, 청소년도 시민이다. 그리고 정치적 주체다. 그리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주체로 인정을 해야된다라는 것을..."

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의견 조사

□ 조사 개요

- 2021년 11월
- 참여관련 전문가 10명. 2차에 걸쳐 조사 실시
- 면담 내용

구분	내용
1차 조사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사회, 정부(지자체), 제도권 안팎에서 활동 중인 정부 및 지자체, 학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기구와 그 밖에 개인 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참여활동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 할 수 있는 방안,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 참여활동과 권리의식 신장을 위해 청소년이 원하는 것,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2차 조사	제1차 전문가의견조사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각 문항으로 구성하여 중요도 정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추가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개 문항을 선정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의견 조사

□ 조사 결과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중요성 정도 (5점척도)			우선 필요한 방안 (중복응답)	
	N	M	SD	응답수	응답 %
1.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자치(예산 등)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등 강화	10	4.50	0.71	2	20.0
2.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시 학생 전체 의견 수렴제도 마련	10	4.50	0.53	-	-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대표 참여 제도화	10	4.60	0.52	3	30.0
4. 학생 대상 학생자치와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참정권, 선거권) 강화	10	4.50	0.53	2	20.0
5. 학교 내 언론/표현/결사의 자유 보장,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나 집단 활동 지원확대	10	4.20	0.79	2	20.0
6. 동아리(자원봉사 등) 소모임 활성화	10	4.00	0.67	1	10.0
7. 교사대상 학생인권. 시민교육 강화	10	4.60	0.52	5	50.0
8. 교육청 조직 내 학생자치 전담부서 설치	10	4.40	0.70	2	20.0
9. 교외 청소년활동 보장(생활기록부 기록 등)	10	4.20	1.03	3	30.0
10.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을 위한 연계 플랫폼 구축	10	3.90	0.88	-	-
Total				20	200.0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의견 조사

□ 조사 결과

청소년기관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중요성 정도 (5점척도)			우선 필요한 방안 (중복응답)	
	N	M	SD	응답수	응답 %
1. 공적 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중심으로 학교 밖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권한 부여	10	4.30	0.67	-	-
2. 공적 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참여구성원과 다수의 청소년 참여 유도를 통한 운영 강화	10	4.10	0.88	3	30.0
3. 공적 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등)와 주민자치회,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활동 강화	10	4.10	0.74	3	30.0
4.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와 협력 강화, 청소년인권 관련 캠페인이나 프로그램 운영	10	4.10	0.74	2	20.0
5. 청소년 참여와 관련한 전문기구로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10	4.10	0.88	5	50.0
6.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권리 교육 강화	10	4.30	0.82	2	20.0
7. 지역 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대상 청소년 권리관련 실무자 교육 확대	10	4.00	0.82	-	-
8. 청소년 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공간, 예산, 전문인력 등) 강화	10	4.50	0.71	5	50.0
9. 주기적으로 지역별 및 전국 단위 청소년 기관 및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10	3.60	0.84	-	-
Total				20	200.0

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의견 조사

□ 조사 결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중요성 정도 (5점척도)			우선 필요한 방안 (중복응답)	
	N	M	SD	응답수	응답 %
1. 지역 민간단체(RCY, YMCA 등) 및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적극적인 청소년 사업 확대	10	4.00	0.67	-	-
2. 학교 및 시도단위 청소년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간단계 플랫폼 구축 필요	10	3.90	0.88	1	10.0
3. 지역 내 청소년 기관, 지역 의회 등과의 협력 강화(청소년 참여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 필요)	10	4.40	0.70	3	30.0
4.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 확대(학교 등 공공기관 포함)	10	4.30	0.82	3	30.0
5. 지역 정책 결정 및 집행 등에 청소년위원회 참여	10	4.70	0.67	8	80.0
6.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한 참여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활동 지원	10	4.60	0.70	4	40.0
7. 온라인 청소년 참여 플랫폼 조성	10	4.10	0.74	1	10.0
8. 총선 및 지방 선거 시 후보자 정책 공약 제언	10	4.20	0.79	-	-
Total				20	200.0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의견 조사

□ 조사 결과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중요성 정도 (5점척도)			우선 필요한 방안 (중복응답)	
	N	M	SD	응답수	응답 %
1. 정부부처 간 연계 및 협업 필요(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10	4.80	0.42	3	30.0
2. 청소년 참여활동 예산 지원확대	10	4.50	0.53	2	20.0
3. 지역별, 기관별, 대상별 민주시민교육(시민의 참여와 실천 관련 교육과정 등) 강화 필요	10	4.50	0.53	5	50.0
4. 연령 고려하여 청소년 참여기관 역할 구분 필요	10	3.30	0.82	1	10.0
5. 주민자치회의 위원회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 폐지와 청소년 선출기회 보장	10	3.70	1.06	-	-
6. 지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소년 분야 신설 및 운영	10	3.90	0.88	1	10.0
7. 지자체 청소년전담공무원 필수 배치	10	4.20	0.79	-	-
8. (가칭) 아동청소년 참여활동협의체 등 통합 지원조직 설립	10	3.70	0.67	1	10.0
9. 행정 제반에서 기획집행 시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체계 마련 (예: 성인지영향평가 등)	10	4.40	0.52	4	40.0
10. 청소년 정치활동 규제하는 법령 개정(선거법 및 정당법 등)	10	4.40	0.70	2	20.0
11.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10	4.00	0.67	1	10.0
Total				20	200.0

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의견 조사

□ 조사 결과

제도권/비제도권 청소년 참여기구 및 참여활동에 대한 연계. 협력 방안	중요성 정도 (5점척도)			우선 필요한 방안 (중복응답)	
	N	M	SD	응답수	응답 %
1.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10	4.40	0.70	3	30.0
2. 참여활동 총괄 조직 및 기구 설립	10	3.70	0.95	-	-
3. 청소년 참여활동 중심의 정책제안 대회, 박람회, 한마당 개최	10	3.70	0.82	1	10.0
4. 청소년 관련조직 간 네트워크 활동-교류 캠프, 연계사업	10	4.40	0.70	1	10.0
5. 청소년, 현장의 교사, 지도사, 담당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주기적인 공청회 실시	10	3.90	0.74	2	20.0
6. 제도권 내외 참여 관련기구의 안정적 운영(예산지원)	10	4.40	0.70	3	30.0
7.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 기획팀 신설	10	4.00	0.67	2	20.0
8. 청소년 참여활동을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및 이를 관리 및 지원할 전문가 양성 필요	10	3.80	0.63	1	10.0
9. 학생생활규정/학칙 개정(인권 보장 기본채택. 외부 단체/사회활동/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학칙 폐지 등)	10	3.90	0.74	2	20.0
10. 수업 시간/시수 단축, 방학 보장 등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10	4.00	0.94	3	30.0
11.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학교밖 청소년 등 포함) 참여 기회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홍보	10	4.10	0.99	2	20.0
Total				20	200.0

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의견 조사

□ 조사 결과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청소년 원하는 것	중요성 정도 (5점척도)			우선 필요한 방안 (중복응답)	
	N	M	SD	응답수	응답 %
1.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장하고 시민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10	4.50	0.53	4	40.0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10	4.40	0.70	2	20.0
3. 청소년 권리(참여권 등)에 대해 이해 교육 강화	10	4.40	0.52	1	10.0
4. 교과과정 내 참여와 실천 활동, 실천 기회 제공	10	4.60	0.52	3	30.0
5.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전달	10	4.30	0.67	3	30.0
6.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결과에 대한 고지	10	4.50	0.53	-	-
7. 학교 안(학생)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	10	4.40	0.70	2	20.0
8. 청소년들의 참여기회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나 학교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현실	10	3.60	0.84	-	-
9. 깊이 있는 참여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과정에 대한 성인의 기다림	10	4.10	0.74	2	20.0
10. 동기 유발(재미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봉사활동 등)의 진행	10	3.90	0.88	1	10.0
11. 청소년 참여 활동의 자율성 보장	10	4.20	0.63	2	20.0
12. 쉼터, 시설, 청소년부모 등 사각지대 청소년 사회 참여확대	10	4.10	0.57	-	-
Total				20	200.0

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의견 조사

□ 조사 결과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요성 정도 (5점척도)			우선 필요한 방안 (중복응답)	
	N	M	SD	응답수	응답 %
1.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한계	10	4.40	0.70	3	30.0
2. 학업 중심적인 환경	10	5.00	0.00	7	70.0
3. 개인주의적 태도로 인해 공동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10	3.70	0.82	-	-
4. 학교 교육 내 민주시민교육 등의 제도화	10	3.60	0.97	-	-
5. 참여를 통한 변화에 대한 효능감 부족	10	4.40	0.70	4	40.0
6. 민주적이지 못하고 억압적인 가정과 학교, 사회 환경에 노출	10	4.20	1.03	1	10.0
7. 연령 제한 등 제도적 규제(투표 연령, 정당가입 연령 등)	10	3.50	1.08	1	10.0
8. 후기 청소년까지 포함한 청소년 노동조건 열악성	10	3.60	0.84	-	-
9. 청소년을 '아랫사람/예비적 존재'로 대하는 차별적인 문화	10	4.40	0.52	4	40.0
10. 비청소년(성인) 중심적 언어	10	4.00	0.67	-	-
Total				20	200.0

26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03. 정책제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청소년 정치적 위상 제고	1. (피)선거권 연령 하향 2. 정당법 가입 연령 하향 3.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보장
활동 공유를 위한 정보 플랫폼 지원	1. 참여활동 네트워크 지원 기관 운영 및 예산지원 2. 참여기구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지원 3. 법적 참여활동과 민간 참여활동 간 정보 공유와 역할 조정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1. 청소년 실천적 참여교육 지원 강화 2. 참여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교육·연수·학습공동체 지원)
청소년(학생) 자치활동 지원	1. 청소년 제도권/비제도권 자치활동 지원(정보, 예산 등) 2.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위상 강화 3. 다양한 청소년자치조직간 연대와 연합활동 지원 4. 청소년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공유와 인정
정부 차원 협의체 구축	1.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아동. 청소년 참여협의체 구축 2. 보호자 및 대국민 대상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인식 강화

28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감사합니다.

토 론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토론문

김성희 박사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김소영 팀장 (한국 YMCA)
김재우 과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현웅 실행위원 (광주아동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토 론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토론문
- 갈 길이 먼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

김성희 박사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청소년 참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청소년은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보는 인식도 문제이고, 시민교육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민주주의 자체도 문제입니다. 어쩌면 청소년들보다 어른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년 참여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최근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인식과 참여의 요구를 이해하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침 올해 ‘인천 학생 사회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맡아 많은 부분에서 같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깊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연구에 담아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과 전문가들로부터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탄탄한 연구 기반하에 제시된 정책 제언이 가지는 무게가 크게 느껴집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는 것을 두 가지와 질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참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청소년 면담의 많은 부분에서 인식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 지역사회 어른들, 학부모 등등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과제의 가장 마지막으로 보호자 및 대국민 대상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인식을 제시하셨는데 매우 깊이 동의합니다. 정부 기관, 지자체 기관, 교육청과 학교 등이 인식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관들 외에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청소년의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 교육 방안에 대해 좀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교사이기에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 사회참여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실질적인 참여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의 청소년 면담에서도, 전문가 의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 참여 교육이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언에도 그런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참여 교육이 학교의 안과 밖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언 중 활동 공유를 위한 정보 플랫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의 연구는 교육청 연구라서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학생과 교사들 모두 절대적으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참여 교육 강화와 함께, 정보 제공과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마침 비슷한 제언이라 더욱 반가웠고 연구자로부터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두서없이 토론문을 쓰다 보니 너무 범위가 넓고 이 자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논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 반가운 마음에 평소 가지고 있던 저의 고민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 기회를 통해 뜻깊은 연구도 읽고 궁금한 점도 질문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자리를 잡으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와 정책들이 뒷받침되면 청소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토 론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토론문
- 청소년모의투표를 통해 본 청소년참여활성화방안 (대견한 청소년에서 한명의 시민으로, 청소년 참여) -

김소영 팀장 (한국 YMCA)

‘더 이상 저희가 이야기 할 때, 기특하다는 단어로 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한 어느 토론회에서 청소년이 했던 말이었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참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청소년참여는 일부의 기특한 청소년이 하는 활동으로 치부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최근 이슈 중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린 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이다.[1] 사안의 갑론을박은 차치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이슈를 사회적 공론장으로 꺼내고, 뜻을 함께 하고자 연대를 구성하고, 이를 이슈화시키는 모습은 몹시 고무적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참여활성화에 관한 꾸준한 민주시민교육들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민청원’이라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플랫폼활용의 활성화를 부정할 수 없다. 청소년활동에 참여의 가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다양한 고민과 더불어,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와 플랫폼을 이용하여 참여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쉽게 의견을 개진하고, 쉽게 반영가능하도록 쉬운 접근이 가능한 제도개선에 있어 열린 사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 한국YMCA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참정권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2018년 국회의원선거, 2020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매 선거시마다 ‘청소년모의투표’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의 중요함을 알리고, 건강한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하는 선거는 인기투표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라는 섣부른 우려와 주위 성인인 지인 유권자들의 의견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청소년모의투표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1) 대한민국 청와대, 백신패스 다시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510

존재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의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색안경을 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동안 3차례 진행한 청소년모의투표는 실제투표결과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청소년모의투표 사후설문결과에서는 선거를 위해 TV토론회 또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선택의 정보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선택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후보자(정당)의 공약이나 후보자(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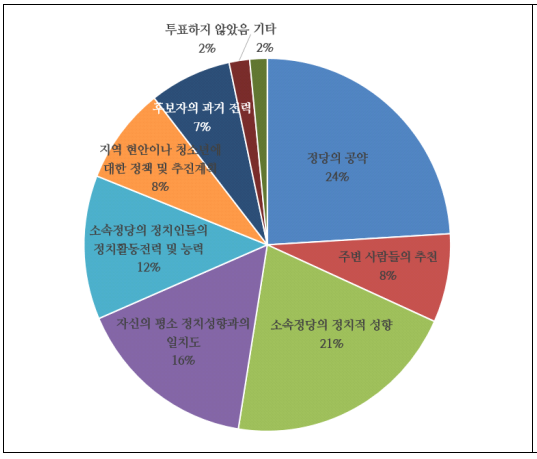

표1_2020 청소년모의투표 비례정당 투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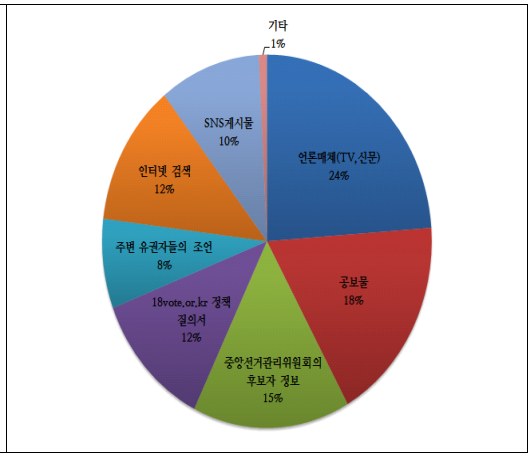

표2_2020 청소년모의투표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은 매체

청소년모의투표는 성인이 주도하여 기자회견, 캠페인, 토론회를 꾸려가는 단순한 형태의 어드보커시운동이 아닌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에 자·타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일각에서의 우려를 걷어내었다.

이처럼 청소년참정권운동의 일환인 청소년모의투표는 사회참여활동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지식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참여에 대한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모의투표를 비롯한 청소년참여활동은 '기특한'의견, '장한'청소년으로 치부되며 하나의 의견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정당활동의 보장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을뿐더러, 정치의 영역은 자기의 삶과 괴리되어 있음을 어릴 때부터 확인받으며 자란 '정치무균실'에서 길러져왔다. 정치는 어렵고,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책을 만들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이러한 정당활동은 사회참여활동의 기초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각 정당에 따라 다르지만 14~16세, 영국과 프랑스는 제한이 없는 정당도 있지만 14세~15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 핀란드의 경우 15세 이상은 정당의 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교 안에서도 물론 허용된다.[2] 최근에는 대선 후보들이 직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가 학교 안으로 들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 정당의 가입과 활동은 민주주의의 정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과 정당 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적이 있으며, 정치적 판단 능력을 인정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전통사회의 '성인'이나 '성숙'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학교의 58%가 교칙으로 학생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3]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 한다며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학교 안에서의 학생자치의 보장과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사회화기관이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보장받는 허용적 분위기를 통해 균형있는 참여교육과 기회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천, 지식, 태도에서 여전히 불일치한 혼란스러움이 있다.

민주주의란 본래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삶의 방식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평범한 일상생활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과연 민주적 원리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을지는 대답하기 어렵다. 머리로 이해하는 민주주의가 정작 자신들의 실생활인 학교에서 일상으로 적용되지 않는 모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신과 허무를, 나아가 참여부족으로 나타나 민주적 시민성이 약화되는 길이다.

학교가 학생이 주체가 되는게 상식적이고 기본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운영과정에 소외되고 있는 상황은 모순적이다. 여전히 학교 안 청소년은 수동적인 참여에 길들여져 있고,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청소년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교사나 또는 학부

2) 이슈와 논점 2021.07.29. / 독일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과 시사점 / 국회 입법조사처
3) 뉴시스 2020.02.14. / 선거권있지만... 절반 넘는 고교, 학생 정치활동 금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14_0000919562

모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채점의 대상이 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참여를 제도화하여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는 학교도 많이 있다. 학교마다 참여 편차가 다른 이런 상황을 제도화를 통해 줄일 수 있다면 학교 내 학생자치를 통한 미시적 참여경험에서 학교를 벗어나 거시적 참여경험까지 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청소년들은 정치 · 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교류로 인하여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보면 여전히 제한과 제도에 막힌 학교생활에 좌절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을 다시 비교하는 악순환의 굴레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은 만18세로 인하되었으나 시민으로서 기본권리는 아직 제한적이고, 특히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청소년참여권은 제한되어 있다.

학생의 이야기는 오로지 학생이 할 수 있고 누구도 대리할 수 없다. 적어도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교육감선거연령의 문턱을 16세까지 낮추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 당사자인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삶과 밀접한 교육부분의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기본권 보장과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낮은 투표참여율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기억되는 교육감 선거를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면 당사자인 청소년 교육영역에서의 참여원리를 강화할 것이다.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경험은 그 결정이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 공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는 그 결정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된다. 공공의 의사결정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갖고 관여하는 적극적 시민으로 성장은 청소년참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기특한 청소년은 더이상 없다. 모두의 의견은 동등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청소년의 의견을 마주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청소년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마련해야 한다. 그 시작은 학생자치를 통한 참여권의 보장에서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보이는 교육행정·마을·대한민둑을 열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여의 제도화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을 통해 참정권의 영역까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토 론 3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토론문

김재우 과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들어가며

참여활동은 개인인 청소년에게도 필요한 요소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의 의의는 개인적 차원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로서 ‘청소년 시민’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는 계기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운영된 청소년 참여기구를 넘어서 학교, 시민사회 내에서 계속되어 온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영역으로 포커싱한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현실을 살펴본 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각 영역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와 권리의식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연구의 과정에 인터뷰 등 참여하였는데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함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연구 결과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이라는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 같은 게 나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거라 믿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니 여전히 해야할 과제가 많고 복잡해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깊은 고민이 계속 상상되었습니다. 저는 전문가 의견조사와 연구의 제언에서 언급된, 각각으로도 충분히 중요하고 또 실행이 만만치 않은 여러 내용 중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지점 중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공간 ‘학교’

저는 경험적으로 참여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효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행동에 옮겼을 때 변화의 지점이 확인되고 그로인해 내가 느끼는 효능감은 그 다음의 참여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변화의 지점이 확인되지 않거나 반영되

지 않을 때 냉소의 순환고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청소년 중 많은 수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청소년들에게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실제 타인과 만나서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 현재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는 "(개정전)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1] 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는 "국립 ·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적시하여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역교육청의 조례로 참관, 발언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3년~2004년 청소년 운동을 했던 시기에 16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해달라고 청원을 했던 당사자로서 아직도 이 법령이 그대로라는 것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효능감이라는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효능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활성화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학생자치에 대한 권한과 범위가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자연스럽게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참여를 통한 자치의 경험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대상 학생인권, 시민교육 강화라는 답변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교육 강화라는 점에서 '교사 대상 시민교육 연수만 더 하면 될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매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주제로 15시간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연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학교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히 '대학입시'라는 무시무시한 블랙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나 방안도 모두 사장되어 버립니다.(대학입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 교사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시민이 갖는 참정권을 제대로 부여받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2]

어떻게 하면 '참여활동'을 생각할 때 바로 청소년기관이 떠오를 수 있을까?

1) (개정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교육 공무원에게 정치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청소년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이고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학교나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참여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청소년 기관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한 광역교육청에서 청소년교육의회 사업을 관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실행하게 했는데 지역의 청소년기관과 연계한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물론 이 사안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학교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혁신교육사업 등에서 지역사회 연계 참여 활동이 실행되면 지역의 청소년기관이 전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청소년기관의 사업으로 지역 참여 활성화를 다각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 구축 강화, 그리고 문턱 낮추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아동,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부처간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참여를 다루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연결됨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청소년(시민) 참여를 함께 이야기한다면 공유할 수 있는 노하우와 콘텐츠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자문으로만 주어진 역할도 권한을 점점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관련 부서의 전신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5년 경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 매뉴얼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청소년의회 관련 사업을 하게된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이 매뉴얼에 대해 문의를 하고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와 관련 부처들이 청소년 참여 활동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결과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제안된 사례와 참고사항은 상시 공유하고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 등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문을 쓰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모사업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모사업 중 참여 분야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청소년시설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고 청소년팀인 경우에도 위 단체나 기관 소속이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비제도권 청소년 참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체들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공동

사업으로 참여 활동 지원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모델 활성화 사업에 기획단계에서 선정 지자체 컨설팅위원회로 2년간 함께 하면서 어느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청소년 참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청소년성장협의체 구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청소년에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모색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는 숙제로 남겠지만 계속 그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며: 전문가 의견 조사의 마지막 문항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광장에서 일상으로, 제도에서 문화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외침은 일상으로 제대로 연결되었을까요? 제도로 만들어진 후 문화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는 UN 공공행정상 수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일상에서 문화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는 존중 받고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연구 주제에서 대상인 '청소년'을 '성인'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성인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 연구' 이렇게 바뀌어도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시민으로서 작게는 우리 가족의 일, 지역사회의 일,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청소년의 참여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우리는 과연 지역사회의 일, 그리고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동료 시민이라고 바라보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익숙치 않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은 성장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르침을 당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서 청소년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이라고 믿어야 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토 론 4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토론문
- 공존의 시대, 위드코로나와 청소년 참여 활동 -

서현웅 실행위원 (광주아동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벽을 보고 구호를 외치다가 구호가 끝남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내는 놀이가 있다.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 덕분에 요즘 대세 놀이가 되었다. 어렸을 때 골목길이나 놀이터 주변에서 들렸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리가 요즘 자주 들린다.

얼마 전 아파트 놀이터에서 5살 된 아이를 가진 아버지와 딸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술래는 딸, 참여자는 아버지 1명. 필자는 2가지 장면에 꽂혔는데 ‘마스크’와 그 반대편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부모와 아이 1명이었다.

마스크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케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결론은 ‘없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머물러 있는 영유아, 아동·청소년들은 먹을 때만 빼고 ‘마스크’에 갇혀 있다. 언제까지일까? 코로나19가 종식되어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지면서 웃는 함박웃음을 마스크 너머로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거추장스러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비대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비대면’이 준 규제와 자율은 우리 일상의 또 다른 전환을 낳게 했다. 줌(zoom)이 그렇고 제페토 등 메타버스의 활용도 그렇다.

학교뿐만이 아닌 현장의 청소년활동도 그렇게 변화해가고 적응해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놓칠 순 없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대면이 주는 ‘희열’과 ‘기쁨’이 그렇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메타버스 안에서 첫 경험하였다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대면’의 상황 속에서 직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마냥 부인할 수는 없다.

위드코로나시대 비행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의 양 날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청소년활동 현장은 견인해야 한다. 그게 전인적(全人的)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닐까?

‘우리 같이 놀래’

> 한국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가정해 보자. 100명 중 14세 이하 아이들이 12명,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가 72명, 65세 이상 노인이 16명 살고 있는 중이다.
>
> 이 마을은 50년 후인 2070년에는 주민이 73명으로 줄어든다. 아이는 5명, 노인은 34명이다. 100년 후에는 마을 주민은 40명뿐이고, 아이들은 4명에 불과한데 노인은 17명인 마을이 된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미래다.
>
> 9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5184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쯤에 반 토막 나고, 100년 후인 2120년에는 2095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
> **[출처] 한국 인구 100년 후, 이렇게 늙고 쪼그라듭니다 (조선일보, 2021.12.10)**

놀이터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던 양 쪽 부모 중 한 명이나 아이 한 명이 ‘우리 같이 놀래’라는 말 한 마디만 하였다면 어떠했을까? 술래 1명에 참가는 4명 더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참여라는 행위의 당위성이 실현되기까지의 ‘장(場)’[1]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참여를 더 의미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그렇고 ‘거버넌스’가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다 ‘우리 같이 놀래’라고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자발적(민간) 차원에서든 혹은 제도적(정부) 차원에서 각기 도생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간 연계 및 협업’이나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플랫폼’이 부재한다면 위드코로나가 요구한 ‘대면’과 ‘비대면’의 협업적 가치를 뭉개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1) 공간 및 제도적 개념. 공간은 청소년활동 현장과 터전(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등)을 제도는 청소년참여를 법(법률, 조례 등)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

공존의 시대와 대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기후변화와 불평등 등과 같은 요인은 청소년활동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 활성화와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느껴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생소한 형태의 온라인 활동이 이제는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참여 활성화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참여, 책임, 협력, 소통 등에 기반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도 매우 필요하지만 대면과 비대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블랜디드 방안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때다.

포노사피엔스, 화면에 갇혀있는 청소년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지혜, 교외 활동을 믿고 안심하게 보낼 수 있는 부모와 학교, 학생 자치(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그런 활동을 지도하고 동반하는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역량강화. 이 발제와 토론 이후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된다면? 청소년 현장은 일할 맛 날 것이고, 나라가 좀 더 젊어지지 않을까?

MEMO

MEMO

MEMO

자료집 21-S40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방안

인 쇄 2021년 12월 15일
발 행 2021년 12월 1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